

자주통일의 길

조국광복60년, 4월혁명45주년 논집 2005

- 발행처 : 사월혁명회
- 발행일 : 2005년 4월 15일

1. 내용의 일부 혹은 전체를 인용, 발췌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저자와 출처를 밝혀 주셔야 합니다.
2. 본 자료는 <http://www.kdemocracy.or.kr/KDFOMS/>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민 주 화 운 동

당신이 만든 우리의 희망입니다

민주주의 발전과 통일한국의 미래.
대한민국의 저력을 이야기 할 때마다
민주화운동의 소중한 경험과 정신을
힘주어 들려주십시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우리들의 소중한 뜻이 펼쳐지도록
국민들과 함께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Korea Democracy Foundation
서울시 중구 정동 34-5 배재정동빌딩 1-3층
전화 02-3709-7500 팩스 02-3709-7530
<http://www.kdemocracy.or.kr/>

4월혁명과 역사바로세우기

조영건

(연구원장, 경남대 교수)

우리는 올해로 4월혁명 36주년을 맞는다. 이 기간은 일제 식민지 통치 기간과 맞먹는 장구한 세월로 민족 독립과 사회 진보가 왜곡된 실상은 4월혁명을 좌절시킨 5.16 군사쿠데타 이후의 기간이 그 템포와 질에 있어서 더욱 우심한 것으로 확인된다. 경제성장과 사회구성체의 변모는 일제하 식민지 자본주의에서도 결코 만만한 것은 아니었고 그 유산이 오늘의 한국 자본주의를 규정하는 계기적 연속성을 부인할 수 없다. 전후 미국 자본주의의 지속적 호황과 고축적, 그리고 냉전적 세계전략구도의 주도적 수행과 관련한 서구·일본 자본주의의 회복과 동아시아에서의 미·일·한 삼각관계의 군사 협력과 국제적 분업 구도의 일환으로 이승만 전제정권에 대체된 박정희 군사정권의 등장은 과잉축적의 미국 자본과 일본 자본을 한국에 투자함으로써 이후 정치적 의존성과 경제적 종속성을 확대재생산시키는 비대칭성 불균등성의 구도를 잉태한다. 이것을 시발로 오늘의 단일 자본주의의 다극화, WTO체제하 무한 개방의 자유무역체제로의 통합적 세계시장의 귀결, 다국적기업과 국제독점 금융자본의 지배력(미국 우위 일본 가세)이 만들어내는 세계체제와 그것의 보완물인 지역경제 공동체(우리와 관련되는 것은 APEC)의 구조에서 한국 독점자본의 축적력의 대응과 세계화 전략에 부응하는 국가경쟁력 강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시장 종속의 심화는 한국 자본주의 주변화와 지속적 성장과 경쟁력 상실의 적신호를 동반해 하고 있는 것으로 이와 같은 민족문제의 위기상에서 5·6공 군사정권과 현금의 문민정권의 연속적 성격 및 그 본질을 인식할 수 있을 것이다.

지난 한 세기간은 민족과 계급의 차별을 극대화시키는 세계사의 벼랑길에서 온갖 고난을 몽땅 뒤집어쓰면서 생도를 헤쳐 나온 우리 겨레의 원초적 생명력을 과시한 역사였다고 할 수 있다.

척외양창의의 구호를 지켜든 반제·반봉건 갑오농민전쟁의 전민적 항쟁의 주검 위

에서 일본도를 쫓고 식민지 침탈을 감행한 지구상에서 가장 후진적이고 가장 잔인한 일본 제국주의의 폭압과 착취 50년 기간 동안은 다른 한편 우리 조국의 이상적 미래상과 동아시아의 새 질서 그리고 세계사에서의 주체적 몫을 단단히 하고자 혈투한 발전적 민족해방투쟁의 노정이었다고 할 수 있다.

해방 이후 공간은 강대국에 의한 동서 냉전체제의 희생물로서의 인위적 국토분단, 이에 더하여 남한에서의 전전 일제 식민통치의 물적 유산(친일 군·관·경찰과 봉건 지주, 예속자본가)을 근간으로 재편한 미군정의 지배구도와 이를 이양 받은 자유당 이승만 권력은 자주독립, 자유평등의 진정한 민주공화제, 분단 지양의 통일을 정면에서 폭력적으로 거역하고 애국 역량을 초토화시켰다.

이승만 전제권력의 위기상은 1950년대 말에 총체적으로 노정된다. 미국과 그에 부수한 동아시아 지역담당의 신흥 일본의 의도는 극동 사회주의 진영 역량을 군사적으로 대응하고 과잉자본의 가장 적합한 지속 투자를 통한 산업간 수직종속체제와 안정적 초과이윤의 시장확대를 의도하는 새 동아시아 전략에 자결적 한국사의 진전을 매몰시킨다. 이승만은 민족 민중 역량이 지배적이던 해방 직후 상황에서 이에 대응할 수 없었던 지주세력에 대체하여 무리수로 환상적 영도자로 분칠을 해서 등장한 1인 전제권력으로서 그 하속으로 자유당을 끌어 모았으나 봉건 보수 지주세력=야당과의 갈등에서 시종 수세를 면치 못한 정권적 불안정성과 자립적 재정정책과 산업정책을 시종 결여, 오직 미국의 잉여농산물 처리의 무상원조에 기생하여 농업 파탄, 매관자본 축출, 부패관료의 양산으로 국민경제를 망쳐 민생을 도탄에 빠뜨린 실정을 자행했을 뿐만 아니라 민족의 동의를 얻을 수 없는 멸공복진 히스테리의 예측 불가능한 노망기의 권력이었다. 이 시기 신생민족독립 국가의 잇따른 출현과 민간 부분에서의 경제적·사회적 자생력의 회복은 정치적 진보의 응집력의 가능성을 시사시켜 주는 것이었다. 그것이 대선에서의 권력 대체 가능성과 차위 야당의 후보 진보당 조봉암에의 지지도-평화 통일과 민생경제에의 열망이 변혁을 예시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승만은 해방 직후 술한 민족 지도자를 암살로 제껴버린 데 이어 법살까지 자행하여 경쟁자를 거세함을 서슴지 않았다. 그리고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든 보안법 통과로 국민에게 자갈과 족쇄를 채웠다. 1950년대 민족의 생존력은 구체적으로 내수충족의 민간기업의 자생적 성장과 우회적 국민투자의 교육열의 산물인 지식학생대군의 성장에서 엿볼 수 있다. 이에 따른 청년·학생 역량이 4월혁명의 선도적 역할을 했으며 4.19 학생혁명에 잇따른 1960년 5, 6월 기층사회의 농민 노동자 실업자의 전지역 확산의 변혁이 총체적 4월혁명의 진행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3.1운동이 1919년 3~4월 전국 각 지방 민중봉기로 전개되었던 것과 견주어 볼 수

있다.) 4월혁명은 8.15 이후 미국의 분단, 종속, 불균등정책의 파탄과 이승만 정권의 역사거역성에 대한 필연적 심판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하여 민족자주, 민주주의, 평화통일의 국민적 염원이 혁명적 파괴력으로 나타난 것으로 국민주권의 실현과 민중권력 창출의 가능성이 제시된 역사적 진변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승만과 자유당 정권이 4월혁명으로 궤멸되었다고 해도 지배구도의 장벽이 만만한 것은 아니었다. 조직적 정치세력으로 보수 야당이 버팀목으로 있었고 미국의 영향력은 국내 세력구도보다 한 차원 높은 개입력으로 막강했다. 4월혁명의 한계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4월혁명의 주체와 정권 담당세력의 괴리, 친일 역사청산을 수행치 못하고 대미 의존의 새 고리에 걸린 것, 국민주권 민중참여 민주주의 쟁취의 실패와 이후 평화통일 억압구조의 강화를 들 수 있다. 아울러 우리는 4월혁명에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교훈을 얻는다. 역사적 전환점에 대한 객관정세의 구체적 정세파악과 준비가 결여되었다는 점, 변혁주체 세력의 조직적 축적이 미약했던 점, 반혁명세력의 청산이 무산되었던 점, 혁명과업의 주도적 장악을 일실했던 점, 중간적이고 소극적 계층을 변혁으로 응집해 내지 못했던 점, 신반혁명세력에의 예견과 차단에 대처하지 못했던 점, 결국 국민주권 민족권력의 확고한 쟁취의 적확한 실천론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적시할 수 있다.

밑으로부터의(von unten) 4월혁명은 옆으로부터의(von seiten) 민주당 보수정권으로 일단 정돈되었다. 그러나 민주당도 불로소득의 권력을 놓고 분당 이전투구를 계속했고 역사청산은 외면했다. 그리고 무상원조의 종식과 자본수출의 미국 자본주의의 요구와 동아시아의 화급한 질서 재편에 경제개발계획의 외형만 짜놓은 수준에 답보, 점증하는 국민의 변혁 요구에 피동적으로 대응하면서 당시 정권은 정세를 제압하지 못했다. 반혁명적 대체세력은 분단냉전 구조하에서 무상군원과 막대한 국방재정으로 양산된 군, 그 중에서도 가장 반공 우익적(이 경우 서구 부르주아적 국민국가의 성립과 국민군대의 민족주의적 성격과 차별성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인 소위 쿠데타 주체세력 소집단은 그들 자신의 소외의 객관 조건과 야망의 주관 의도를 도발적 쿠데타로 감행하는 사태로 치닫는 것이다.

1.군사정변의 태동은 6.25 전쟁중 임시수도 부산에서의 발취개헌 파동 당시 이승만을 거세해야 할 것이냐는 시도로부터, 가장 조직적인 집단으로서의 군은 분단 반공정권 대체세력의 제1 예비 티켓이었다. 4월혁명 전후로 해서의 쿠데타 의욕, 그리고 2대 악법 반대 및 한미 행협체결 반대투쟁, 남북교류와 민간통일 운동을 통한 자주·민주·통일의 기운이 드세어지던 1961년 상황에서 쿠데타 거사로 준동하던 상

황은 당시 장면 정권에게 잘 파악 감지되던 것이었다.

최근 12.12 군사반란과 5.18 광주민중항쟁 과정의 미국 외교문서 공개자료에서 폭로된 것은 신군부의 동향을 미국이 샅샅이 추적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애초의 공화당 유신 잔재세력의 재집결에 정권대체의 비중을 두고 있다. 신군부에 대한 인식을 바꾸어 또 하나의 군사쿠데타와 군사정권을 유인해 낸 미국의 역할은 새삼 놀랄 일이 아니다. 해방 공간에서 한국 문제 처리를 신탁통치안으로부터 전환, 이승만에 대한 초기 갈등을 덮고 단선·단정 정권 담당자로 지원한 사실의 역사적 중간항으로서 5.16 군사쿠데타의 태동과 진행에서 미국의 역할이 어떠한가를 추리하는 것은 크게 어려운 일이 아닐 수도 있다. 1980년대의 시점에서 소위 Cherokee(소말 시킨 인디안 부족 이름)이란 암호명의 미국 전문에서 한국을 마늘과 후추를 먹는 전사들이 모인 사회(society of garlic and pepper eating combatants)라고 하고(이는 일인이 한국사람을 닮아 쿠사이라고 모멸하던 인종주의적 편견과 꼭 같다) 한국 사람을 들춰라고 칭하며 정치인도 미국의 환심을 사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구걸꾼(supplicants)이라고 하면서 시민 학생의 민주화 투쟁·광주 민중항쟁을 공산화 체제전복으로 매도한 것으로 미루어 보아 1960년대 초입의 4월혁명 이후 상황에서 역사 청산 요구, 진보와 변혁 그리고 통일을 지향한 민중적 요구가 미국에는 도저히 용허되지 않았으리라는 것은 어렵지 않게 판단될 수 있다.

미국이 박정희 군사쿠데타 세력에 대한 공식적인 수준의 비토와 이후 현실수용 지지 추인이라는 경과는 12.12 군사반란, 광주에서 학살군 투입과 비교되는 바가 있다. 아무튼 알려진 것으로는 반공국시, 미국과의 유대 등의 공약에도 불구하고 민족주의(뒤의 민족적 민주주의까지 포함) 지향성이 차후에 변질되었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려운 견해일 따름이다. 5.16쿠데타를 4월혁명과의 연속성 시각에서 민족국가 수립, 근대적 국민국가 형성, 산업화와 개발독재, 이를 매개한 민족적 근대경제 형성과 민주화 실패라는 이원론적 주장은 자유당 말기로부터 민주당 정권의 미국 경제협조처 기관 주도의 경제개발 계획 준비에 비추어 보면 군사정권의 독자적 차별성을 찾아볼 수 있는 근거는 없다. 박정희 시대를 국민국가론, 신제도론, 개발독재론으로 한정하여 분석하는 주장은 전후 독점자본주의 발전과 미국의 세계전략에 대한 인식 결여, 일제하 지배세력, 해방후 식민추종세력의 수구기득세력으로서의 계승에 대한 인식 결여, 한국 민족 통일 국가형성을 위한 실천적 투쟁의 민족주의 정통성의 인식 결여에서 그 오류의 근원을 찾아볼 수 있다.

박정희 군사 통치 이데올로기는 반공과 경제성장으로 집약된다. 한반도 미군 주둔과 동아시아에서의 미·일 군사 공조체제의 전략에서 미·일 독점자본의 과잉 축적이

가장 안정적 투자대상지역인 신흥개도국 범주, 그 일환으로 한국에 투하되고 국제독점자본의 이동의 틀에서 기회와 하청을 획득한 군사정권이 무소불위의 개발 독재를 휘두를 수 있었던 것이 하나의 고도성장의 전범을 만들어 낼 수 있었던 것은 틀림없다. 외자도입 관치금융 정경유착이 배태하는 권력 부패와 부실로 귀결된 독점재벌 경제는 유신이라는 극악한 종속 파시스트 축적메커니즘의 막다른 궁지에 도달하고 선진자본주의의 탈산업화 탈지역화의 새로운 축적메커니즘의 변화와 관련한 산업이전을 통한 중화학공업의 돌진은 세계자본주의 불황국면에서 총체적 국민경제의 파탄과 반경제논리적 군사경제와 전쟁몽상으로 외연되어 박정희 군사정권은 끝내 국민적 민중저항으로 마감하고야 만다.

박정희는 그의 모태로부터 얻은 유전자대로 1930년대 일본군국주의 이데올로기에 유폐되었던 것 같다. 조국근대화와 민족중흥도 이 틀에서 해석될 수 있으며, 범죄적 일제와의 차이는 1960, 70년대의 상황에서 마일 독점자본의 손바닥에서 곡예를 연출했던 피노키오에 불과했다는 점이다.

박정희 통치의 냉전, 분단은 민족분열의 골을 패었고 의존, 종속은 자주, 자립의 축적을 매몰시켰으며 특권, 집중은 노동자, 농민의 착취와 극심한 사회의 양극화를 배태했다. 뿐만 아니라 박정희의 부국강병은 미국과 일본의 부국강병 우선의 귀결이었으며, 소위 하면 된다는 슬로건의 진면모는 주권매도, 생산자 수탈, 인권탄압, 무력통일을 서슴지 않는 것을 의미한 것이었다. 박정희의 국적은 한민족의 얼과는 멀리 나간 기실 일제 모조품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박정희의 정통성은 다름 아닌 일제식민 정통성, 미국의존 정통성, 파쇼 정통성, 분단의 정통성이었으며 이는 반자주 정통성, 반민주 정통성, 반통일 정통성이었을 따름이었다. 박정희 유신권력은 전민적 저항으로 몰락했으나 박정희 유산은 실로 심대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

1. 정치군부의 사육, 12.12쿠데타, 미국개입의 광주학살, 5공 신군부정권 등장, 민권 민생 억압, 남북대결, 6공 정권 파산의 위기를 보수 3당연합 구도로 전환시킨 문민정권 이행은 박정희 유산의 현재적 산물이며 진정한 변화와 개혁, 역사 청산, 역사 바로 세우기의 결절점은 다름 아닌 박정희 청산이라는 명제에 도달한다. 역사를 뒤집고 사회 진보를 제지하는 토대는 정치군부, 독점재벌, 수구 기득 정치세력, 개발독재 과정에서 양산한 관료테크노크라트의 부패부문, 기생적 상인 지주 지하자산 부문, 냉전 대결 반통일, 반공극우 잔재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박정희가 남긴 물적 토대를 운존하며 수구기득세력의 법인화를 추인하는 상황 추수 민주화, 세계체제

를 주도하는 다국적기업 국제금융자본에 대한 가혹한 시장개방에 피동적으로 끌려가는 것으로는 결코 변화와 개혁을 담보해 낼 수 없다. 남북 대결, 지역분열 구도, 노동자 억압체제, 농민 해체, 지식인의 매관화 공동화, 통일운동의 억압을 통한 정권 유지, 기득권 체제 안보, 의존 구도의 확장이라는 박정희 유지를 계승하는 것은 ‘역사바로세우기’를 거스르는 반자주·반민주·반통일일 수밖에 없다.

우리가 말하는 역사바로세우기는 단순한 역사적 사실 구명, 수위 조절의 과거청산, 타협과 공생의 정권유지를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주권자 국민의 참여적 역사바로세우기, 대중의 주체적 역사바로세우기, 민족 주권과 국민권력 창출의 실천적 역사바로세우기이다.

우리의 역사바로세우기의 실천적 당면과제는 두말 할 것도 없이 자주·민주·통일이며 4월혁명의 절대절명의 이념구현이다.

현단계의 자주는 정치주권 군사주권 외교주권 경제주권의 실현에 있다. 현단계의 민주는 국가보안법을 위시한 악법폐지와 개방과 진보의 정치민주화, 재벌해체, 기초산업인 농업수호, 생산자의 참여를 통한 경제민주화, 개정노동법 질서하에서 노동운동, 그리고 농민운동, 시민운동, 청년학생운동의 고양을 통한 사회민주화라고 할 수 있다. 현단계의 통일과제는 세계체제로부터의 민족공동체의 주변화, 국제독점 금융자본의 전 한반도 지배의 위기를 돌파해서 자립과 번영의 경제사회를 창출하기 위한 민족에너지의 결집-냉전대결의 실질적 종식인 화해 영구적 평화구도의 구축을 토대로 하는 민족통일장정의 공통기반 조성, 민간 주도의 민족대단결의 통일역량의 활성화의 집적으로서 민족주체적 통일의 대준비라고 할 수 있다.

역사바로세우기를 통한 역사바로만들기의 핵심과제인 자주·민주·통일의 실천론은 상호 관련성으로 발전된다.

유구한 민족적 전통 생활양식의 계승, 신시대의 노동해방과 자유, 평등, 복지사회의 건설, 민족국가 경쟁력 확보, 공화주의적 공동체의 21세기 균등 세계화에의 주체적 기여, 이것이 4월혁명의 완성을 궁극적으로 획득하는 통일조국의 가치론이다.

고맙습니다.

사월혁명회보 제44호(1996.6)